

|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_ 계층별위원회 좌담 |

# 계층별위원회, 절박한 이들의 대화 통로 돼야

## 논의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시 : 2018년 8월 2일 16:00
-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오영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사회)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비정규직)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청년)
  -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청년)
  -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여성)
  - 김양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력홍보팀장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여성)
  -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코너에서는 청년편과 여성편에 이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각의 영역에 국한된 이야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계층별위원회의 구성과 의제에 대한 종합적인 좌담이 이루어졌다.

좌담에 참석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가장 절박한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목소리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지면으로 중계한다. 좌담은 지난 8월 2일 오후 4시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계층별위원회, 취약계층이 목소리를 내는 공간

**오영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사노위가 구성 준비 중인 '계층별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층의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계층별위원회의 필요성과 기대, 주요 의제, 출범 절차와 구성방식, 계층별위원회 위원장과 본 위원회 계층 대표와의 관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계층별위원회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운영해 오면서, 기존의 노사정위 체제에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저대변 계층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소홀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계층별위원회를 구성해 저대변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층별위원회로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각 계층의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

습니다.

달라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계층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최고위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계층 대표들이 한 분씩 참여하고 의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층별위원회는 의제 개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계층별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본위원회에 참여하는 계층 대표에게 전달하고, 계층 대표가 본위원회에서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계층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층별위원회 출범의 필요성과 기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남신**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절박한 이해 당사자가 사각지대에 있고 그들의 문제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문제를 논의할 공간은 두 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경사노위가 대표자회의와 계층별위원회의 두 축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노사정위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바뀐 것도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일단은 있겠지만 대표되지 못하던 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연 확대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지현** 과거 노사정위가 과연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대표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일 때 사진 찍는 용도가 아니라 정말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어떤 사안도 사회적 대화가 없으

면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가 그런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어떤 결정권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대로 이야기가 된다면 적폐를 해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계층별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 어떤 대화 창구를 통해서 의미 있게 이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과제는 있지만 일치되기도 하잖아요. 여성이 곧 청년이고 비정규직인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의제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됩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현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시민권 회복

**김병철** 대화를 통해서 합의한다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는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노사관계에서 합의의 틀이 복원되지 않고 그에 대한 답안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대변되지 못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미조직 취약계층이 도저히 문제 해결의 통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

노위가 새롭게 혁신하면서 계층별위원회가 꾸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기본 틀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 틀이 갖춰졌어도 형식적으로 남아 있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준비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변되고, 유의미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시스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계층별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을지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수정** 청년,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한다는 아이디어가 일자리위에도 있었는데요, 저도 참여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사노위에 계층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일자리위와는 다르게 잘하실지 궁금합니다.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우려가 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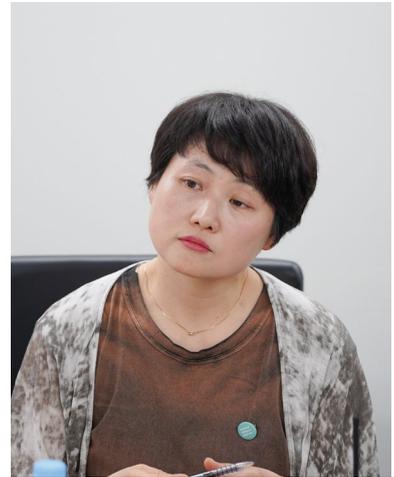
또 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층’이라는 말로 청년을 표현한다는 게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년, 여성, 비정규직은 취약계층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겠지만, 계층이라는 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배진경** 청년과 여성과 비정규직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는 질문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세 집단을 흔히 쉽게 이야기하듯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로 치부하고 시작하면 굉장한 오류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한 주체로 존중받고 당연하게 자리매김해야 하는 존재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박탈해온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민권 회복의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접근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계층’이라고 하는 말이 이 위원회들을 총괄하는 단어로 적절하냐는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이 여성일 수 있고 비정규직일 수 있어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 모

두 교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찾지 못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다른 집단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성차별과 관련해서 지난달 5일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일자리 위원회에 여성분과로 참여하면서 가져온 성과라고 봅니다. 경사노위 논의들에서 좀 더 세부 주제로 들어가는 위원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의제를 가져갈 것인지, 위원회 별로 어떻게 해쳐 모여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포괄할 것인지는 또 다른 논의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현 한국희망재단 홍보위원

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립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2015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

**손영우** 사회적 대화는 그 자체가 갖는 민주성도 중요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다시 조명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갑-을 사회’라 일컬어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금수저 흡수저 사회’가 의미하는 출생환경이 일생을 결정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희망을 안고 출범한 현 정부는 작년에 개혁을 추진하면서 난관에 봉착합니다. 초반에 양극화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려 했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문제에서 보듯이 개혁이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왜 가로막혔느냐를 보면 개혁에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개혁에 찬성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서 추진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구직자와 비정규직 간의 대립,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대립 같이 소위 ‘을들 간의 대립 때문에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또 다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월수입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논쟁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을들 간의 연대’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층별위원회가 집중 조명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 대화 없으면 을들 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오영하** 계층이라는 용어 문제는 더 적합한 용어가 있는 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며칠 전 다른 모임에서 나지현 위원장님이 여성, 비정규직, 청년 문제가 개별적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복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들은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신** 계층별위원회보다는 부문위원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름이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노사정위는 거의 내정된 단위들만 모이는 회의체계였잖아요. 그걸 넘어서려면 구성 과정이 달라야 하고, 특히 대표되지 못하는 당사자들과 관련해 좀 더 세심하고 내용을 충실히 답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의제 중에 저희가 최근에 당면한 의제는 최저임금과 정규직화예요. 우선 최저임금 산업범위 논란은 임금체계 개선으로 먼저 정리했어야 할 문제예요. 그 방향에서 구체적인 이견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논의했다면 지금처럼 소모적인 논란과 을들 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일도 없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납니다.

저는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사, 공무원의 일자리를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봐요. 사범대생들, 교대생들, 임용고시생들, 예비교사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임용고시라는 높은 문턱이 있어서 어렵다고 봤지만, 대전 고법 선고 판결도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던 터라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됐거든요. 공공부문 절반이 학교비정규직인데 절반은 실패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문제구나' 생각했어요.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임금이 100% 보전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늘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는 건데, 임금이 천착하니까 기본이 완전히 허물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임금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주 절박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 외에도 산업재해든 사회안전망이든 다 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비정규직이나 여성, 청년이 산재의 가장 큰 희생양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안전망, 특히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중요하게 보는데, 노후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런 사안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의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정규로만 한정한다면 다른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이 양대 입법과제인데, 임기 내에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입법의제이기도 하고 정책의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의제이기도 한데, 계층별위원회가 꾸려져서 양대 입법과제를 경사노위에서 주요 의제로 해서, 참여정부에서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고 남북관계처럼 진전시킬 수 있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하나라도 성과를 보여야

**나지현**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저희 조합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1년 전에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을 냈다가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했어요. 내용이 공무원과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교육공무직이라는 신분을 만들어서 신분을 안정시키자는 거였는데, 전부 반대를 했어요.

열화와 같이 반대한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신분이 안정화

되고 공무원화되면 총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공무원을 적게 뽑을 것이고 시험이 더 힘들어진다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시급하죠.

정부가 처음에는 이런 층을 파트너로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자꾸 보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그걸 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는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사후에 '식대가 중요합니다' '교통비가 중요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미 범은 통과된 다음이었죠. 전에는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계층 분리를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대안 없이 최저임금 하나의 원리만 작동해가지고서는 전체가 변화할 수 없다는 걸 우리도 깨닫는 계기가 된 겁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내고 사회 주류로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과제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이 과제를 계층별 혹은 부문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가 하는 고민이 동시에 들어요. 채용 성차별 같은 문제도 법을 바꾸기로 결의하기는 했지만, 그게 실제로 은행 전체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래도 어디서든 시작은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위 중에 중요한 파트가 경사노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요.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현 일하는여성 아카데미 이사

현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사

현 서울노동권익센터 자문위원



여성 쪽 의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하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 거든요. 아주 부분적으로는 비정규직 의제 중에 특수고용이 너무 많아요.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가 너무 많아지는 게 지금 전체 노동시장이잖아요. 사실 아무도 다루려 하지 않고 외면하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라도 성과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위원회를 어떻게 아우르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 만날 전달체계 필요

**김병철** 청년 내에서의 격차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이 모두 똑같은 문제를 겪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소득과 지위, 배경에 따라 생애주기가 결정되고 있는 게 청년문

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청년의 시기가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삶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불평등이 있다는 거죠.

출발 선상을 평등하게 맞추기 위한 전 국가적 정책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기존에 시행됐던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소득보장 정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집안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실업안전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실업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사회에 진입하고 하나의 업종에서 평생을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를 고려해 실업 상태에서 국가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안전망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청년층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든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 후에 바로 다음 직장을 구해야 하는 늪에 빠지는 상태가 되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개혁이 필요해요. 20대 같은 경우 최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인데 이 또한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죠.

직업훈련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직업훈련도 청년 세대 내에서 특권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민간의 질 좋은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집안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죠. 평생고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업종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면 평생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권리로 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노동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의 형태가 많아질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 더욱 그럴 겁니다.

다양한 노동 형태, 프리랜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질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당사자들에게는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수많은 사업장, 미조직 사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누구 하나 나설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노조 할 권리를 국가와 정책이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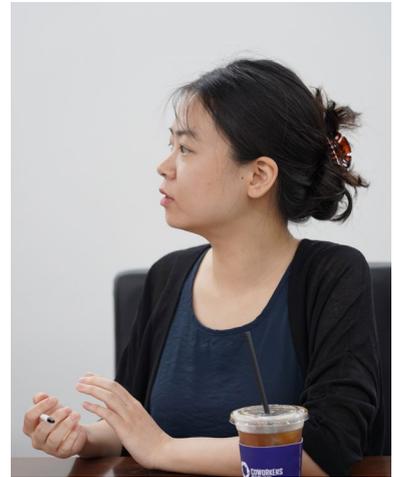
청년유니온에서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하는 '블랙기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사회적 성숙, 직장 민주주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많은 악덕 사업주, 블랙기업들을 국가가 그냥 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수정**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 청년문제는 비정규직이나 여성문제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구조가 엄청나게 변화한 게 청년 세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의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존의 실업률을 낮추는 방식과 동시에 다른 방향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고용이 붕괴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의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동생애가 출현하는데 노동의 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단순히 고용의 문제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제 대학 나와서 SAT 봐서 삼성 가는 사람들 말고 그 밖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거나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망, 고립의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청년수당도 지금은 그것으로 능력을 개발해서 좋은 직장에 가라고 하는 데 초

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직업능력이 고갈되고, 대학을 가지 않아서 친구도 없어져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주선 받아 갈 수도 없는,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자본이 고갈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대기업 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노동생애가 출현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일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삶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들을 많이 만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는 사람들, 특성화고에 들어갔다가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 지원 기관에 잘 오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죠. 그런 전달체계를 지역 곳곳에 두고 주목하고 관찰하고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팀 팀장

##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철학부터 정립하자

**배진경** 위원회가 중장기 의제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나 더 없자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철학이 없다면 단타성으로 일부 국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을 만들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국가는 항상 여성을 인력 활용의 대상

으로만 설정해 왔어요. 아니면 자궁으로 치환하거나. 이런 대상으로만 존재를 규정하다 보니까 항상 정책이 비틀리는 거예요. 지난 9년 동안 보수정부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여성들을 시간제 일자리로 계속 내몰았어요.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계속 시간제로 몰아가는 정책을 지금 정부도 가져가고 있어요. 여성을 온전한 하나의 노동력,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일단 철학부터 정립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란 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런데 조금만 수평을 맞추려고 해도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성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봐요. 그게 모든 문제의 총합인데,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아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심도 깊게 봐야 해요.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로 청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청년 안에서도 여성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채용 성차별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채용이라는 과정 자체가 똑같은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중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조건이에요. 기본적으로 임금이 낮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노동조건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조건이고 아이를 남편과 같이 돌보면서 받는 임금으로 뭔가 플러스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절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요. 세종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곳이 세종시거든요. 일을 하면서 자기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지현**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 중에 더 이상 직업 모델, 노동자 모델이 옛날과 똑같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예 괜찮은 직장에 갈 기회가 봉쇄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공시 공부를 뒷받침을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청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공무직화에 반대 목소리를 낸 청년들은 공시 공부라도 할 수 있는 청년들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안정화하려는 거라고 해도,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를 안 뽑잖아,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런 목소리를 내요. 조직, 미조직을 떠나서 그들이 고대변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 누리고 있고 미래를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더 크게 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어려워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게 진보이고 발전이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찾아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면 그보다 좀 덜 힘든 사람은 정책의 혜택을 받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도 혜택을 받듯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사람을 발굴하면 동정의 대상으로 쳐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회구성원들이 다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든 할 때마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지금도 똑같이 듣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한다고요. 큰돈이 안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까지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핑계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명분을 만드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을 만들어서 기재부가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남신** 최저임금도 그렇고, 정규직화를 하향평준화하고 망가트린 핵심적인 배후세력은 기재부입니다. 작년부터 공공연히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했고, 2020년이 아니라 임기 내 1만 원 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공약하고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보다 오히려 힘이 셉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하

면서 빠져리게 느꼈어요.

## 책임의식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와야

**배진경**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복지 인프라이고 이 사람들 임금을 주는 건 정부인데, 항상 최저임금보다 낮게 줍니다. 정부가 민간에다 운영을 위탁하고, 시간당 임금과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운영비까지 모두 다 합해서 시간당 수가를 정하고 지급합니다. 이걸 계산하고 나면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보건복지부는 항상 기재부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기재부에 가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동자라서 그러냐, 그러면 특수고용을 하면 되는 거냐는 이야기까지 기재부한테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면 되는 거냐고 되묻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기재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최저임금 위반 교사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다 정부의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가장 우선에 놓고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박탈해 가면서 국가가 복지인프라를 운영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경사노위가 기재부장관한테 권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남신**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고 하는데 핵심적인 축이 재벌 중심 경제구조인 거고, 그걸 뒷받침하는 경제부처, 특히 기재부가 너무 강력합니다. 이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건, 노동문제에서는 고용노동부밖에 없는데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부속부서라고 치부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사노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사회적 약자나 노동을 비롯한 취약계층 당사자 입장에서 이를 바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균형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노사정대표자회의나 부문위원회에 들어오는 단위와 성원들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진전시킨다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 따지고 책임전가하기 좋으니까 들어오는 구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처럼 전투적이고 대립적이고 무책임하게 들어와서 얘기할 거면 밖에서 장외투쟁 하는 게 백번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대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갈 당사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의 지향과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문위원회로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은 일자리인데, 결국 평균적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전국적 수준에서 평균적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안 되면 을들끼리 싸우는 것밖에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 부문위원회로 분리도 필요하지만, 공동의 과제로 모아서 이걸 매듭짓게 하려면 결국 임금수준이나 복지수준, 고용형태를 다 포괄해서 일자리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고 최저임금이나 정규직화도 이렇게까지 소모적 논란으로 갈 거 같진 않습니다.

부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렇게 된다면 성공사례를 하나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 선정에 있어서 합의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화점식으로는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의제 3개 정도를 먼저 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 대화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세밀하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모든 위원회에서 성평등 노동의 관점으로 논의해야

**나지현** 그런 점에서는 절박한 주체들이 참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박한 주체들은 구체적인 요구가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합의를 만들어 냅니다. 사실 원래 개별노동조합들도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미덕인데, 전국 단위에서는 합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뛰쳐나가고 뒤에서 현안문제는 따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운영돼야 합니다. 절박한 주체들은 가능합니다. 절박한 주체를 팔아서 대립구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주체들이 실제로 합의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배진경**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축이 관료와 재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 더 없어서 성차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심각한 성차별의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쳐다보고 성차별을 견어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차별을 견어낸 자리에는 성평등 노동을 도입을 해서 그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

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절박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하셨는데, 당면한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자들은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의 의해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의를 했지만, 이게 아직도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도 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절박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자 자격조차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노동자들 중에서 특수고용은 말할 것도 없고, 샤프심 통에 샤프심 넣는데 7원 하는 노동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의 달인에 나와서 '하루에 19시간 일하고 4만 원 벌었어요'라고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청년)

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현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 4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 계층별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수렴되는 연결고리

**김병철**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고 빈곤한 상태에 놓인 집단들은 통계에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예산이 낭비되고, 당사자들이 효능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의 함정에 빠져서 단순히 실업률 높아지니까,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최저임금 낮춰야겠네 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사노위가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현장 당사자들의 문제와 상태가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함께 고민해야만 유의미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층별위원회에 들어오는 당사자 집단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현장의 당사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위원회 처음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에게 우리 청년들의 삶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리고 우리 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목소리를 받아 안고 회의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들이 큰 효능감을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정책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공사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백화점식으로 한 번의 회의나 단기간에 해결하겠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몇 가지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합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경사노위가 우리 삶을 대변하고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박하게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지현** 해결할 것을 정하면 작은 거라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가 그런 걸 하기에 좋은 단위입니다. 노사정도 들어오고, 공익도 들어오고, 문화적 영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가능하고, 국회에도 압박할 수 있어요. 힘든 사람들에게는 국가나 사회가 나를 위해 뭘 하지 않는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못 들어가지만 최저임금 결정할 때마다 그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외친 것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뿌듯함이 있습니다. 대변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서벌턴’(subaltern, 하위주체)이 많이 대변됐으면 합니다.

**배진경**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조지를 할 수는 있는데, 성공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사노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하겠다는 것도 목표치에 기반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들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나지현** 당연합니다.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고민과 더불어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안 되는 노동자들, 노동자성이 강한데도 노동조합법으로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실업급여나 사회안전망이 될 텐데, 고용보험을 한 번도 붓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사회안전망 안에 포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해결의 줄기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진경** 한 마디만 더 드리면 기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이유가 노동시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가방끈이 길어져야 번듯한 자리 하나는 꿰찰 수 있다는 생각이 부모들 머릿속에 가득히 박혀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시장이 잘못됐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기본을 다지는 일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시스템을 깔고 거기에 뭔가 더 얹을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 대표성, 당사자들의 토론과 숙의로 만들어가야

**손영우** 미조직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이 기구를 통해서 증폭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는 정부 정책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실제 사회 계층의 목소리를 정부나 의회, 대통령 귀에 더 큰소리로 전달되도록 하는 스피커 장치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스피커의 볼륨이 더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사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사회적 의제로 되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그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의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있고 힘이 있다면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계층은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 계층별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제별위원회는 사회적 의제를 가져가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계층에 있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목소리가 커지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 해당 문제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나눴으로써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한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경사노위가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계층별위원회는 ‘을’들의 위원회입니다. 각각 개별 계층뿐만 아니라 계층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계층별로만 토론했는데 어떤 의제를 제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회들 간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지현** 이야기가 이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영하** 계층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들의 역할 중에 의제설정이나 정책제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던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런 장치를 고민할 때, 역할을 고민할 때 확실히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경**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제를 얘기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걸 극복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영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계층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계층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본위원회의 계층 대표와 계층별위원회의 위원장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입니다. 계층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과 계층 대표가 일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별개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영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

**손영우** 구체적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향을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층별위원회의 핵심은 여성노동, 청년노동, 비정규직노동,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표성을 가지면서 표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자신이 속한 계층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위원회와 계층별위원회의 관계 문제도 ‘계층별위원회 위원이 본위원회로’가 아니라 해당 계층에 포함되는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본위원회에 가장 직접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원칙에서 고민해봐야 합니다.

**김병철** 대표성 문제는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청년의 경우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고 하면 없습니다. 청년 단체의 역사가 굉장히 짧고, 사회적 자본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꼽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독립성과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사자 집단들이 어떤 의제를 다루고 어떤 의제를 본위원회에 올릴 것인가, 누구를 계층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긴 시간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 또한 숙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층별위원회가 당사자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연결고리로 작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장성을 실제로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대변하고, 활동을 일궈나가고 있는 단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단위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단체가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는 차차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지현** 계층별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들어올 것이고, 비정규는 양대 노총에서 각각 한 명씩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단위에서는 큼직한 단위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제안하는 단위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비정규직의 의제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본위원회 계층 대표는 계층별위원회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고, 출석을 꼭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계층별위원회 위원장과 꼭 겹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층별위원회는 좀 더 의제 중심으로 가되, 본위원회에 가는 입장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잖아요. 의제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계층별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 위원장은 그런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할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맞고, 본위원회 계층 대표는 계층별위원회에 반드시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바를 가지고 본위원회에 나간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위원회 대표 - 계층별 위원장,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손영우** 둘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는데, 계층별위원회 위원장과 본위원회 계층 대표가 독립하면 계층의 목소리가 사회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고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양대 노총의 대표성은 존중하되 앞으로 해당 계층별위원회의 조직화 여부에 따라 위원회 내에서 해당 계층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증대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계층별위원회의 계층단체들은 양대 노총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철** 양대 노총의 추천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데 추천권을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회적 대화의 장이 대변되지 못하는 집단에게 정책결정의 권한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양대 노총의 추천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분위원회 계층 대표와 계층별위원회 위원장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층별위원회 위원장이 각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위원회에 책임지고 의견을 올리겠다는 것이 담보돼야 계층별위원회가 유의미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야, 사회적 대화의 본질에 부합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별 위원장에 호선된 위원장을 양대 노총이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통해서 위원장을 분위원회 계층 대표로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과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겠죠.

**나지현** 일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층별 위원장이 양대 노총이 임명한 것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하되 대표로 나가는 사람은 계층별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고, 저항이 있거나 분리되면 계층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문별위원회가 분위원회와 일치되는 것이 가장 좋죠. 분위원회가 의결하고 결정하니 일치되면 좋지만, 긴장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는 부문별위원회는 이 안에서 호선을 하는 것이 맞죠.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목소리를 내는 절박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남신** 추천권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은 인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경험을 되짚어보면 당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비정규센터와 청년유니온이 들어가서 생긴 균열이 있거든요.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실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권이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차선 수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층별 위원장과 본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는 동일인인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회의 논의도 그렇고 계층별위원회의 논의가 진전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또 책임이 분명해야 사람이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층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완전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할 의사가 없고 사회적 대화에 동의하지 않아도 반대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끌시끌하더라도 대표성이 담보됩니다. 민주적 구성 과정을 거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추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노사단체들이 유연하고 사회적 대화의 근본 취지에 걸맞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계층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검증된 실력자가 위원장을 해야 하고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나쁜 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선례가 계층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회적 대화 기구는 좀 다르다는 효능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미조직이나 미대변 또는 저대변 계층의 관심도 끌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를 맨 마지막에 하고 여성, 청년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계층별위원회를 먼저 잘 구성해서 비정규위원회도 너무 늦지 않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난관을 도외시하고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가시밭길이라면 그것대로 염두에 두고 차선이나 차악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의하는 사람만 데리고 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실패할 겁니다.

**김양수** 경사노위가 하반기에 정식 출범을 해야 하는데, 문호를 개방하고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력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양대 노총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은 특히 더 어렵고 복잡해서, 여성과 청년은 구성되는데 비정규직은 많이 늦어지면, 본위원회는 개최해야 하는데 빼고 가기도 어렵다는 게 고민 지점입니다.

**이남신** 결국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계층별위원회 수준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 부분에 동의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먼저 모여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양대 노총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기한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안 올 곳은 안 올 거라고 미리 치부해버리고, 오는 단위만 가지고 진행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오라고 해도 다 오지는 않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곳이 오겠죠. 특히 비정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표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서 당사자나 당사자를 대변하는 단체, 활동가들이 양대 노총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 단계를 생략하면 오히려 희화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 참여는 열어야 하지만 기준은 노동문제 중심

**김병철** 노동계 단위에서 합의를 하는 것 또한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전논의 없이 계층별위원회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큰데, 노사정위 역사를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양대 노총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이해관계를 관찰시키기 위해서 미조직 당사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합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경**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정부위원회는 한 성이 전체의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위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준수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청년이든 비정규직이든 여성이든 참여해야 합니다.

**나지현** 비정규위원회에 특수고용 담당자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수고용이 최근에 화물이나 택배 같은 부분만 부각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실제 특수고용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덜 돼 있고 자기의 목소리를 전투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사장돼 있습니다. 가내노동도 큰 범위에서 보면 특수고용 영역이거든요. 또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에서 제일 많이 차별 받고 제일 힘든 노동자가 여성들입니다.

**배진경** 미투 운동에 화답하는 것을 경사노위에서도 진행해야 하는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지형을 바꾸는 것으로, 기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여성을 사람으로, 한 사람의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청년위원회든 여성위원회든 비정규위원회든 다 같이 다뤄야 합니다.

**오영하** 다 열어놓아야 한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부분까지 열어놓아야 하는가가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노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도 문호를 개방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김양수** 여성단체 중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노동을 대변하는 단체, 여성노동의 의제를 말하는 단체로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나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라는 범위가 있어야지,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단체들까지 다 포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력홍보팀장

**나지현** 더 분명히 한다면 여성노동, 비정규노동, 청년노동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수정** 찾다 보면 단체 이름에 청년이 들어가는 곳 위주로 찾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로노동자모임에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체 이름에 청년이 안 들어가니까 검색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훨씬 밀접한데,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괴로운 일이지만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당장 하반기에 발족해야 하고 일정도 촉박하고 여력에 한계도 있겠지만, 양대 노총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단체들을 접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나지현** 알고 있는 청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오영하** 저희가 더 많이 만나면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각 주제마다 정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운 날씨에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